

“국정원 특수활동비 靑 상납 철저 수사해야”

진박 가리기 여론조사 활용

문고리 개인 유용 정황도

한국당 “정치보복이다” 반발

보수야당을 제외한 여야는 2일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문제를 일제히 비난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 엄단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은밀하게 받은 특수활동비로 총선용 여론조사를 하는 가 하면 측근인 소위 ‘문고리 3인방’의 개인적 유용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나라를 30년 전으로 되돌린 적폐 중 적폐”로 규정하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다. 역대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전수 조사하라”며 정치 공방으로 몰아갈 태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봉근, 이재만 등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형세로 조성된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라며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 돈으로 부동산사고, 용돈으로 나눠 쓰면서 호가회유했던 이들을 전부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이들을 가리켜 “나라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자들”이라며 “이런 자들을 단죄하고, 그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적폐청산의 이유이고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박



“특활비를 어이할꼬”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차장들이 2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근혜 청와대 국정농단 세력은 나라 곳간과 자기주머니의 구분 없이 국고를 사금고처럼 사용한 흔적이 매일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 자금으로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진박(진실한 박근혜)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여론조사비용으로 5억 원이나 지급한 것이 드러났고 개인적 유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안보에 사용해야 할 돈을 특정 정당 선거활동에 활용했다 하니, 이것은 나라안보에 뒷전이고 오직 진박 당선만을 확정한 영터리보수, 영혼 없는 보수의 민낯 아니겠는가. 앞에서는 안보를 떠들고 뒤에서는 안보 예산을 털어 쓰고 있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쌈짓돈이었는데”며 비판에 가세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

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진술이 나왔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월 1억원씩 현금으로 받아 ‘쌈짓돈’으로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보장에 관련된 정보, 보안 사무를 위한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 안위를 위해 쓰였고, 그것이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지시였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발 나아가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해 검검이 예산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예산부터 손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전격 폐지했지만 특수활동비로 4930억 원이 편성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련 의혹을 여당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국정원 활동비를 뇌물죄로 몰아가는 정치보복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낱알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및 각 수석비서관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해성사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보수 야권 재편 초읽기

한국당 오늘 의총서 ‘朴 제명’ 처리…바른정당 진로 논의

보수야권 재편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 결정에 이의 제기 마감 시한이 2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 열흘 동안 당의 탈당 권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된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제명 문제를 종결 짓는다. 진박(진실한 박근혜)계의 거센 반발 등을 감안해 최고위 입장을 늦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홍 대표는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직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원회의의 연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홍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진박계에선 반드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결 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김태용·이재만·류여해 최고위원이 홍 대표의 인적 청산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 결이라는 치킨게임은 양측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의견을 모아서 결

론을 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당이 3일 최고위에서 박 전 대통령 제명 문제를 매듭지을 경우 바른정당과 통합파와의 재결합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은 오는 5일 저 녁 의원총회를 열어 통합전대 방안을 포함해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한다. 통합파의 중심 격인 김무성 의원이 이미 5일 의총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터라 통합파와 자강파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날 의총은 사실상 양측이 함께 자리하는 마지막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파는 일단 통합전대론을 고리로 자강파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통합파들은 5일 의총에서도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면 즉시 집단탈당을 결행할 태세다. 일각에서는 “최고위원회의의 연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홍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진박계에선 반드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결 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김태용·이재만·류여해 최고위원이 홍 대표의 인적 청산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 결이라는 치킨게임은 양측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의견을 모아서 결

론을 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당이 3일 최고위에서 박 전 대통령 제명 문제를 매듭지을 경우 바른정당과 통합파와의 재결합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홍종학은 중기부장관 적임자”

“재산증여, 탈세 아닌 절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야권발(發) ‘홍종학 의혹제기’에도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벤처혁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부장관의 적임자”라고 힘을 실는 모습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증여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었다”면서도 “(그럼에도) 홍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에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부장은 “홍 후보자의 재산 증여 논란 관련해서는 국제성 홈페이지

에 절세관련 가이드북이 있다. 국제성이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홍 후보자의 증여세와 관련된 납부는 이 책 내용대로 있었고, 관련된 회계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서 이뤄졌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를 적임자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책 등으로 갑의 횡포를 막아내는 데 앞장 선 경제민주화 전도사였다”며 후보자 경력을 세세히 소개했다.

같은 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홍 후보에 대한 망신주기식 과도한 의혹제기는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야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

야 3당은 지난해 여당인 민주당이 중 심이 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제도 등을 바꾸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데 야3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

당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기간 방송법 개정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했던 법안에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이 이사회 과반의 결이 아닌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다수제’와 이사회 구성 개편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국민-바른 입법 연대 여부 ‘5·18 특별법’ 최대 관건

바른정당 확답 없어...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5·18 진상조사 특별법 처리에 대한 양당의 입법 연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바른정당이 5·18 진상조사 특별법 처리에 국민의당과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면 그동안 양 당의 연대 및 통합 움직임에 회의적 모습을 보였던 호남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원내 현안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10여개 입법 과

제를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막판까지 조율에 나서고 있다.

우선 양 당은 특별감찰관의 경우 특별검사처럼 야당이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법을 포함한 방송개혁법안, 규제프리존법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등 담은 경제활성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의당은 5·18 진상조사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함께 추진하자고 바른정당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

만 바른정당은 이날 밤까지 입법연대 사안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철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바른정당의 내부 사정이 매우 복잡하다 보니 아직 입법 연대에 대한 답이 오지 않고 있다”며 “바른정당이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이 동의한다면 5·18 진상조사 특별법 연대 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보수 야권이 5·18 진상조사 특별법 처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연대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바른정당이 5·18 진상조사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외면한다면 국민의당과 연대는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바른정당과 연대를 추진했던 당내 인사들도 정치적 타격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개혁 보수를 표방했던 바른정당도 기존의 득권 및 지역구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민음이 있는 대학 - 민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작소로 36